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2023년 3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2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(승진소요기간 등)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,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0조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5호 및 제2항 제1호, 제2호의 휴직기간<u>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</u> 예외로 한다.

제28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징계처분이나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 해제처분 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. 제43조(복직)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인이 원직 복귀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본인과 협 의하여 유사부서에 동일 보직으로 복직시킬 수 있다.

제44조(직위해제) 제1항 중 "해제할 수 있다."를 "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"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이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
안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90-760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26조(승진소요기간 등)
① (현행과 같음)
2
휴직기간과 직위해
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
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
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
결정으로 무죄, 무효 또는 취소된
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 예외로
한다.
제28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
①~③ (현행과 같음)
④ 징계처분이나 또는 직위해제를
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
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
징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무효 또
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
<u> 승급시켜야 한다.</u>
제43조(복직)
① (현행과 같음)
2
<u>다만, 본인이 원직 복귀가 어렵다고</u>
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본인과 협의
하여 유사부서에 동일 보직으로 복
<u> </u>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직위해제) ① 사장은 다음 각호	제44조(직위해제)①
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	
를 <u>해제할 수 있다.</u>	<u>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란 법률」 제19조 4항

제19조(육아휴직)

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
참고사항

□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2-855호 「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」(2022. 12. 19.)

□ 개선방안

○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,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수 및 승급 등에서의 불이익 처분을 개신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

□ 「기관별 보수규정, 인사규정 등」개정

개선 (예시)

<인사규정>

제25조(승진을 위한 최저재직기간) ② 제1항의 기간에는 <u>휴직기간·징계</u> 처분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은 합산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에</u>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합산한다.

3.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

제28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 ⑤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<u>직위</u> 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<u>취소된 경우에는</u>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.

□ 개선방안
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
 - ※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외에도 직위해제 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규정과 같이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
 - ※ 직위해제 <u>사유를 보다 명확히</u> 해 '형사사건 계류 중'은 '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'로 개정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**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요건** 에서 제외

⇨ 「기관별 인사규정 등」개정

현행 (예시)	개선 (예시)
제26조(직위해제 및 대기명령)] ① 직 원이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</u>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	제26조(직위해제 및 대기명령)] ① 직 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<u>직무수행 능력이</u> 부족하거나 근 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	1. (현행과 같음)